



청년들의 정치개혁 제안 ②

정치와 청년을 잇다

박서영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윤시원 |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정윤서 | 한국외대 독어독문/정치외교학과

I. 들어가며

10년 후 미래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고 눈앞의 현실에 허덕이고 있다. 작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불과 36.4%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 7명이 결혼 자금과 출산·양육 부담, 그리고 고용 상태 불안정 등의 이유로 결혼을 포기한 것이다.¹ 심지어 통계청은 2021년 기준 청년 자살률은 전체의 25.6%이며 특히 20대 자살은 2016년에 비해 무려 43.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년 자살의 원인 중 경기 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생활 문제가 18.9%를 차지하였다.²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 및 고용 불안 속에서 청년들은 삶마저 포기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더 살기 좋은 사회, 미래의 동량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제시하는 여러 청년 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 채 짧은 수명을 마칠 뿐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년의 미래를 바꿔야 하는지 더 절박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20대 청년 셋이 이번에는 학문이 아닌 같은 청년들에게서 그 방향성과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치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정치 및 경제적 참여를 통한 변화의 움직임에 앞장서는 주체였다. 1960년대 청년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한국 산업화에 숨을 불어넣었고 1980년대에는 이후 386세대라고 불리는 청년 세대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서 기반을 닦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수혜를 입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과 사회 균열에 부딪히게 되었다. 청년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매몰되고 있다.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이철승은 저서 『불평등의 세대』에서 정치 및 경제 권력을 장악한 기성 세대에 의한 세대 간 불평등을 지적하였다. 청년들이 과소대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형중·김재경(2023)은 청년들의 어려움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사회구조적

¹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51>

² <https://www.seoul.co.kr/news/plan/debt11/2023/08/24/20230824004003>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단순히 청년 대상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삶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세대를 넘나드는 연대로 총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³ 즉, 정치 개혁으로 더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 청년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 이 글에서는 청년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상에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제시할 것이다.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

시대에 따라 청년들의 삶이 변화한 것처럼 청년들 개개인의 삶 또한 균일하지 않다. 대학교 밖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청년들이 가득하다. 또 다른 청년은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누군가는 한국 밖에서 꿈을 펼치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20대에 가정을 꾸리는가 하면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닫는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정책은 단순히 취업난, 저출생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일률적인 방안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

결국 정치권은 단순히 지표나 수치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청년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치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청년을 대변할 수 없지만 성별, 직업, 학력, 장애, 성적 지향 등 여러 요소에서 최대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 16명을 인터뷰했다. 끝으로 우리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의견을 보다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다.

II. 청년 인터뷰

본 인터뷰는 청년들이 겪은 경험과 환경이 정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치에 대한 문제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2030 청년 가운데 총 16명(남자 8명, 여자 8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프리랜서, 대학원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무관심한 수준부터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³ 윤형중, 김재경. (2023). 2023 청년정책의제 : 다차원 빈곤과 연구활동가. LAB2050.

인터뷰 문항은 먼저 자신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소개하는 문항으로 시작하여 정치 인식 및 한국 정치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견해에 대한 응답 중 무응답은 본문에서 제외하였으며 응답의 유사도로 유형을 나뉘어 각 유형의 대표 응답을 정리하였다.

Q1. 거주지(시군구), 이름, 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여자 A: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만 28세, 작업치료사
- 남자 B: 충청북도 진천군, 만 24세, 사회복지무원, 작가
- 남자 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만 26세, 정당 활동과 그 외에 여러 하고 싶은 일을 함
- 남자 D: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만 36세, 난민 지원 NGO 단체 활동가
- 남자 E: 광주광역시, 만 29세, 대학원생,
- 남자 F: 충남 홍성군, 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 남자 G: 서울시 강남구, 만 24세, 대학생
- 여자 H: 서울특별시, 만 25세, 간호사
- 여자 I: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4살, 금융권 영업직
- 남자 J: 경기도 남양주시, 만 23세, 대학생, 언론사에 공연예술과 관련하여 칼럼을 기고함
- 여자 K: 인천시 계양구, 만 24세, 현재 무직
- 여자 L: 서울시 서대문구, 만 22세, 대학생
- 남자 M: 서울시 노원구, 만 30세, 대학원 재학
- 여자 N: 서울시 동작구, 36세, 초등학교 교사
- 여자 O: 경기도 고양시, 26세, 교육 관련 기관 프리랜서이자 활동가
- 여자 P: 서울특별시 관악구, 만22세, 대학생

Q2. 'Q1'의 정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나만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살다가 20살 이후 경험이 모토가 되어 여러 알바 및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작업치료사로 8년차로 일하고 있고 작년까지 재활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신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원, 작가): 모르는 사람, 혹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나는 '공익'으로 규정된다. 뭐 하고 사냐는 질문에 답하기 가장 쉬운 답변이기 때문.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기후위기를 더 이상 머리로만이 아닌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었을 때, 비거니즘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패스트 패션산업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만으로는 더 이상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일들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활동을 그 한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할 때에도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주로 기후정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정당의 활동당원으로서 정체화합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저는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기왕 태어난 김에 ‘하고 싶은 것들을 맘껏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지원이 갖춰진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사회’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아동 인권 및 교육복지, 그리고 난민지원 분야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There’s enough food for everyone’s need but not for everyone’s greed”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경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지방 사립대를 다니던 중, 학교를 휴학하고 외국에서 3년 간 생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주류에서 벗어난 주변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해왔고 이러한 인식은 몇 년 전까지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동안의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시선으로 저와 제 가족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는 주변인일 수도, 그리고 저 또한 주류로서 주변을 주변화 시키는 주체로서 활동해 왔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역설적이게도 ‘딱히 어디에 속하지 않은 것이 나’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줄곧 충청남도에만 살아온 만 27 男입니다. 제가 중요시 하는 바는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꾸준히 하는 건 아무나 못하며, 당장 눈앞을 본다기보단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보다 넓게 숲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저를 가장 잘 규정하는 단어는 공감과 이해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한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자”라는 모토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로 3년 차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를 가장 대표하는 단어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검색할 일이 생긴다면 청년 정책 위주로 알아보는 편이에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일을 할 때의 성취감으로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얻어 가는 사람입니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행정학과에 진학한 후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 사회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과학 전공 과목으로 학점을 꽉 채운 것 같아요. 읽는 책도 주로 사회과학 서적이구요. 그래서인지 평상시 일상에서 문제를 접할 때에도 사회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을 볼 때도 그렇고요. 현재 언론사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 시리즈도 뮤지컬 같은 공연을 사회과학적으로 읽어보자는 생각에서 시도한 겁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곧바로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지역에서 당직을 맡았습니다.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 운영위원 등을 맡았고, 중앙에서도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서 당직을 맡았으며, 대선캠프와 지방선거 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엔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 여자 K(만 24세, 무직): 한국 교육을 받고 자라 흔히 성공이라 일컫는 안정적인 삶을 얻고자 치열하게 지내왔으나, 동시에 한국의 치열함에 지쳐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20대입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 경제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는 ‘정면돌파’와 ‘돈’입니다. 저는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항상 정면에서 마주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를 극복하고자 고등학교 1학년때 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저의 성격과 맞진 않았지만, 이를 통해 과도한 수줍음이나 긴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면 수학 과목을 파고 들어가고, 나의 환경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본가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오며 환경을 바꾸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면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은 최근 저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인데요, 저는 현재 증권사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를 다루고 내가 속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치외교학에 관심을 가졌고 이 관심을 발전시켜 대학교 진학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외교학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느꼈고, 저는 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증권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이 목표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욕망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므로 ‘돈’이라는 키워드가 저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중되고, 누구도 어떠한 사회경제적 장벽 없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사회를 바라는 청년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성평등교육하는 교사모임을 운영합니다. 성평등교육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경험을 배움으로 삼고자 성인이 된 후 여행을 하고, 취업을 한 뒤로는 계속해서 일터와 소속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병행하며 대학을 졸업했고, 두세 곳의 일터에 발을 담가 두었어요. 직장인이라기에는 배움에 많은 시간을 쓰고,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이기도, 프리랜서이기도 합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취준생도 아닌 그 어딘가 청년에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사회과학을 공부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7년째 쿼어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픈쿼어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관련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때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중입니다. 정치, 인권, 환경 등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만한 사람’ 이 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Q3. 평소 ‘정치’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드나요?

청년들의 응답 유형화 결과 한국 정치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지배적이었고, 정치에 대한 피로감 및 낮은 관심도에 대한 응답이 이를 뒷받쳤다.

A1. 정치에 대한 거리감, 피로감, 어려움 및 낮은 관심 언급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머리 아픔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저에게 ‘정치’는 저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선뜻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나에겐 멀고도 어려운 단어... 직업 특성상 정치적 중립 의

무가 있기 때문에... 이하 생략.. ㅎㅎ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개인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만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지식과 본인만의 생각 정도는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멀지만 가까운 것.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려워서 따로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A2. 희망적 견해: 정치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소통과 합의 그리고 이어서 풀뿌리 정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권력과 자원의 배분 문제를 논하는 정치의 거시적인 측면보다, 한 개인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지닌 다른 주체들과 소통하며 사회 내 공통된 지점을 만들어가는 숙의와 합의의 과정으로서의 정치에 개인적으로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A3. 한국 정치에 대한 회의적 입장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이합집산, 기득권, 탁상공론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데이비드 이스턴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가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스턴의 정의에 맞춰 이해하는 편이에요. 예컨대 우리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권위를 둘러싼 권력 투쟁에 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는 식이죠. 또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 정치가 이념적으로 명확한 논리가 있는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하게 되네요.
- 여자 K(만 24세, 무직): 그들만의 리그, 그 어느 당도 진정한 유권자의 어려움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에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이익을 조율하고 권력관계를 투쟁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정치라는 단어는 욕망의 사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제가 정치 = 욕망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는 먼저 정치를 바라볼 때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자기자신의 생존과 이익

을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정치라는 상호작용을 하므로, 정치는 이익을 보존하고 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에 있어서 ‘이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정치인들의 모욕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대중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이익을 향한 욕구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평소 정치에 대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 엘리트들이 선거 때만 시민과 소통하는 척하고 평소에는 국회라는 그들만의 공간에서 가만히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우리의 삶, 일상 곳곳에 뻗어 있는 것, 그러나 먹고사니즘에 바쁜 서민의 눈을 돌린 채 기득권의 이득을 챙기는 입법과 행정의 향연.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 그러나 동떨어져 보이는 것. 많은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나 사회생활을 하며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 피곤해서 외면하고 싶으나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어느 수업에서 배웠던 ‘정치란 권력의 분배 방식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는 제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는, 멀고도 가까운 존재 같습니다. 정치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치’만을 생각하면 피로감이 큼니다. 토의와 숙고가 이루어지는 정치가 아닌, 대통령 후보급 정치인들의 서로에 대한 겨냥과 비난, 인신공격 등의 갈등만이 발생하는 장처럼 느껴지거든요.

A4. 기타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요원, 작가): 정당 관련 이슈가 제일 많이 떠오른다. 정치와 관련해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것이기에 그런 것 같다.

Q4.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긍정적 견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정적 입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다. - 이때,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요인으로는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포퓰리즘과 혐오 정치, 합의가 아닌 싸우는 모습, 정치적 양극화 및 낮은 대표성이 언급되었고, 이로 인한 정치도 피로도가 증가한다는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1. 낮은 관심도 / 의견 없음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원, 작가): 마땅한 생각이 안 든다.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지지하는 정당이 과반 의석을 먹었기 때문인 듯.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나에겐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 같다. 배워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사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과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요즘 정치에 무관심한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살기 힘들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학업, 아르바이트, 취준에 분배한 후 남은 시간을 취미와 정치에 쏟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 커리어에 대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바닥난 에너지를 끌어다 정치에 쓸 여력이 없어요. 왜냐면 정치는 불안정한 제 삶과 관련해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정치집단이 없다고 느껴서 '정치'라는 필드에 관심을 가진 바에야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낫다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2. 부정적 입장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음. (저출산, 청년정책 등)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들은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성별과 연령대가 과대 대표되어 주요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저에게 한국사회 내 정치는 새롭고, 창의적이고, 시대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고착화되어 있고, 양당의 세력 싸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점점 우익 포퓰리즘이 인기를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익 포퓰리즘은 혐오를 추동하기 때문에 사회에 점점 만연해지는 혐오와 차별의 시선 때문에 피로합니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뉴스 혹은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정치 관련 파트가 등장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치인들의 각종 의혹 또는 비리, 그리고 서로 간의 대립 등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 이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줘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선거 방송 등에서는 재밌는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정치적 갈등에만 초점을 맞춰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정치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오랜 이야기이지만, 최근의 정치적 양극화는 정서적 양극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다른 정당/진영 지지자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고,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거죠. 정말 동의합니다. 저는 정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당원 분들을 자주 만나는 데, 저런 당원이 참 많습니다. 상대에게 사용하는 단어도 저급해졌다는 걸 크게 느낍니다. 만나는 당원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뚜껑” 같은 멸시적인 별명을 붙여 사용하고, “윤석열 술 먹다 죽어라” 같은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느끼시는 거겠죠. 또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이 수준 높은 유권자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본인의 정당 활동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태도들이 모여 합의하고 숙의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합의 하나까 생각했는데, 요즘 합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의 기초는 합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만나는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을 보면 합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수결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한 채, 의석 수가 많으니 밀어붙여야 한다는 논리를 당당하게 펴시더라고요.

일방적인 법안 처리도 옹호하시고, 또 독촉하세요. 합의의 과정이 실종된 정치가 과연 정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금의 정치더라고요. 팬텀도 정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입장에서 다른 당원들의 스탠스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정당 정치인보다 같은 정당이지만 계파가 다른 정치인에 대해 훨씬 공격적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팬텀이 주류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다른 정치인(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나 소장파 정치 인들)을 욕할 때,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왜 싫으세요” 하니 어떤 분은 스파이라고 하더군요. 상대 정당 스파이요. 그 순간 제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개혁적이지 않아서 싫다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개혁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도 개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팬텀 문제가 부상하면 정당은 큰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가치를 따라야 할 정당이 이념을 따르니까요. 그러면 정당의 일관성은 기대할 수 없고, 권력자를 따라다니는 이합집산만 반복하지 않겠나 싶어요.

- 여자 K(만 24세, 무직): 앞서 기재했듯 그 어느 정치인도 대한민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원인 분석이나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표를 던지며 당의 이익만을 위할 뿐입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체감하며 좌절하고 체념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정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피로감과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지금의 정치를 보면, 시민의 삶을 개선하려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가 점차 사라지고 권력에 기대어 my way 하는 모습만 남아 쓸쓸해요. 다만,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희망을 가져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언제나 그래왔던 갈라치기가 더욱 극심해진 상태, 그리고 그 상태가 저열하다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은 정치행태 자체보다도, 언론 때문에 느낀다. 생산적인 정치 토론보다는 자극적이고 실속 없는 뉴스만 그저 받아적으며 무한히 양산하는 상황.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피곤함과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변할 줄 알았으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들을 보아올 때, 분야별로 다채롭게 거꾸로 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와 관련된 기사 속 내용들은 대부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는 대표되는 곳이 없고, 일상에서도 연대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 듯합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이전 질문에서 답변했다시피, 지금의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이 권력을 꽉 쥐고 있고, 그 거대 양당들은 유권자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의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서로를 헐뜯기에 바쁜 상태니까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언론사에서 정치 관련 뉴스를 다루는 것만 봐도, 청년이나 여성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고 50대 남성들이 수두룩한 검은 정장 무리들로 가득하니까요. 더 나아지려면 현 상태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Q5. 정치가 본인 삶과 어떤 면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15명의 청년들이 모두 정치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사안으로는 직장, 주거, 안전(e.g. 재난, 참사, 의료 접근성 등), 물가, 일상에서의 차별 등이 거론되었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저출산 및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들의 삶과 많이 밀접해 있음.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원, 작가): 내가 하는 모든 게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배웠는데, 실감이 들진 않는다. 내 지역구가 누가 됐고, 대통령이 누가 됐던 그냥 살아가 겠기 때문. 삶에 직접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인지하진 못했을 것 같다. 일상 속 정치권력 관계에 대해선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30대 작가 친구를 많이 알고 있다. 그들과는 나이 상관없이 친한 사이라 만나서도 편안하게 얘기를 나눈다. 그러나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는 곳의 30대 공무원들과는 친해지기 많이 어렵다. 나이와 직급의 차이 때문이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정당 정치를 통해 결정되고 시행된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변화에 또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미래와 정치가 무엇보다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정치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 소소한 안전들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들까지 지자체 및 한 국가에 속해 있는 저에게 매일같이 긴밀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주변 20대 남성들이 빠른 속도로 우경화 되고 여성에 의한 남성 역차별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주변 사람들과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직업 특성상 나랏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정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여러 면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은 우리의 삶은 정책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고 이는 때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정치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 법이 개정되고 그 법에 따라 내 생활이 바뀔 수 있어 삶의 전반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크게 맞닿아 있어요. 최저임금이 그 예라고 생각해요.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니까요. 청년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직장 생활과 연관 있다고 가정한다면, 급여나 복지 관련한 부분과 맞닿아 있을 것 같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네. 사회 현안은 어디까지나 정치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제가 곧 겪게 될 취업난, 이미 만연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붕괴, 또 언젠가 제가 마주하게 될 노인 빈곤, 모두 결국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거창한 문제뿐 아니라, 정치로 인해 제가 얻은 작은 이득들도 있죠. 눈에 보이는 이득들이요. 곧 받게 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도 정치의 산물이고, 또 제가 작년에 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도 결국 정치의 산물이 아닐까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에 바로 잡히는 것들이 결국 정치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저는 정치가 제 삶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K(만 24세, 무직): 정치는 제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주거 공간부터 학교와 회사 그리고 대중교통 등 일상 속 대부분이 정치적 의사결정이 개입된 공간이며, 시간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정치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청년 지원 부분에서 정치가 저의 삶과 닿아 있다고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 본가가 부산이라, 여러 기숙사들에 거주했었고 매번 LH 청년주택 공고가 뜨면 신청하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매물의 퀄리티나 또는 지원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한 해 한 해 달

라서 거주할 공간을 찾아볼 때 그 해 청년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지원하려고 하는지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최근 총선으로 구청장이 바뀌었는데요, 구청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대상의 범위도 달라 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대상을 타겟하고 있는지, 지원을 집중하는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적 호기심과 생활 측면에서 정치가 제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치솟은 생활 물가를 피부로 느낄 때, 교육공동체가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고 일궈 온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폐기될 때, 내가 사는 동네의 구석구석이 깔끔해져 행정실천을 짐작해볼 수 있을 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거대한 인명 사고 혹은 의료파업 등 시민의 안전, 생명권이 침해되는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나를 지우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과 터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정치가 저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법률과 정책들은 다 정치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제 삶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장의 주거 독립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청년 주택도, 평상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금액도 다 정치의 산물이잖아요? 더불어 쿼어, 환경,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러한 이슈들에 관한 뉴스나 주제들을 팔로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Q6. 정치 분야의 이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약 1/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선거제도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 팬텀정치 등 현행 한국 정치 제도/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인권, 환경, 교육, 주거, 취업, 복지, 언론개혁, 지방소멸 문제, 의대 증원 이슈 등 개별 사안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A1. 현행 한국 정치 제도 및 정치 문화의 문제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요원, 작가): 쟁점거리가 아닌 것의 쟁점화. 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누군가는 수사하고 누군가는 수사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현상에 대한 평론 없이 존재하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정치 무관심층엔 견해 차가 있는 쟁점으로 여겨진다. 누군가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걸 갈등과 혐오의 정치라 진단한다. 잘잘못이 명확한 사안은 빠르게 해결하고 진짜 쟁점을 논의하면 좋겠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다당제라고는 하지만 양당제와 동일한 정치 구도가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옴으로써 현실 정치 구도 내에서 다양한 사회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논의만 수차례 해온 선거제도 개혁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면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 마련되어 앞서 언급한 한계가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서로 발전을 기원하면서 부족함 점을 배우며 복돋워 주는 문화.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팬텀이라고 생각합니다. 팬텀으로 인해 정치가 저급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갈등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걸 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팬텀의 문제는 결국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고민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치도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많이 느끼는 건, 거대 정당들마저 거리로 나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요즘 들어 부쩍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며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국민, 더 정확히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이야 거리에서 호소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이 택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힘을 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 정당이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건 어찌 보면 무능해 보입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제왕적 권력의 해체라고 생각해요. 권위주의적이고 불통인 국가 지도자 때문에, 2022년 이후로 V-Dem 민주주의 점수가 끝없이 추락하고 민생보다는 권력을 위한 정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A2. 개별 사안의 문제점

①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저출산, 청년들의 삶이 현재 어렵고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음.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노후 생활 자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청년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수는 점점 늘어나고있다. (국민연금/세금 증가로 추후 청년들도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② 교육 문제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교육 제도 문제와 청년 취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여자 K(만 24세, 무직):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답이나 실패 그리고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모두를 한 곳으로 달려가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나누는 교육은 결국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수능이 끝이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취업 준비, 회사에서의 승진 등 끝없는 경쟁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울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감이 부족해지는 것은 결국 답이 하나인 교육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인권, 환경 문제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올해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어서 한국 내 정치 분야 이슈에 대해 아주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침 및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민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할 수 있다면 애초에 처리할 재활용품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품보다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량을 늘리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과일 몇 개 사는 데에도 큰 상자(종이), 상자 내부 과일 고정 틀(스티로폼), 겉 포장(비닐) 등 불필요한 소재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현재 난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 내 난민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국가로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규모를 더욱 키워가려고 한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 내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면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극심하게 낮은 난민 인정률도 그렇고, 인도적체류자라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기타’ 항목으로 만들어 ‘난민 인정자’와는 사뭇 다른 조건의 체류자격을 제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 내 외국인인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의 유형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외부 인력만을 유입시키려는 느낌을 받았고, 인도적 지원의 성격을 띤 수용성은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보호소”의 존재와 그 운영 실태를 살펴봐도, 한국 내 난민들이 어떻게 기본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발생한 이른바 ‘새우 껍질 사건’은 단 몇 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그 외에 공공서비스 및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노인의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접근권, 그 외에도 주거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기본 권리를 보장 받고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안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에 대한 공공성이 더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위한 환경,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주거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로 많은 청년들이 돈을 잃고 주거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했

고,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매번 시위가 열리고 있잖아요? 특히 주거권의 경우에는 삶의 방식과 그 퀄리티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정치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대로 된 해결 방안 탐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퀴어로서, ‘차별금지법’도 제발 시급하게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큰? 중대한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④ 기타 사안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의대 증원 이슈가 관심이 가는 문제죠. 이게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도 한정되어 있고, 당장 응급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데 가능한 인력이 없어 전원을 가고, 구급대원님들도 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보니 늘 어떻게, 언제 결론이 날까 궁금해요.

- 여자 I(만 22세, 대학생): 저는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 광화문에서, 종로 거리에서 누가 어떤 시위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뉴스에서 알려 줘야 전 국민이 만약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면 연결되고 있음을 느낄 것이고, 이런 이슈에 대해 몰랐다면 심각성을 느끼게 될 텐데 언론에서 다루는 사건의 성격과 개수가 선별되고 한정되면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감대와 연결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는 다수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실현하고, 침해받은 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통제될 시 ‘다수가 모이는 것’부터가 힘들어져 결국 정치라는 것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지방 소멸 문제 해소해야(일자리, 주거환경, 경제적 안정성, 빈부격차 등의 이슈가 얹혀 악순환이 반복됨) -> 지역세 부과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규제 강화해야.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잘 모르겠습니다.

Q7. 한국 정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 문항에서도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정치 문화와 정치에서의 다양성 및 대표성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청년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A1.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정치 문화에 대한 바람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요원, 작가): 실질적으로 대화할 가치가 있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차이’에 관한 문제는 의미가 있다. 북한, 노동자와 기업, 교육, 복지, 경제, 여러 견해의 차이가 있어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와 같은 목적이 같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이재명의 대장동 이슈 같은 건 논쟁의 의미가 없다. 잘못이 명확한 문제이기 때 문이다. 그러한 문제가 차이의 문제로 보도되며 논쟁의 영역으로 비친다. 그건 곧 ‘갈등과 혐오, 분열의 정치’라 평해지며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상대 정당에 대한 또는 상대 정당의 특징인에 대한 비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여러 정당이 한 국가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7번 질문 답변과 동일(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서로 발전을 기원하면서 부족한 점을 배우며 북돋워 주는 문화.)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누누이 말했지만, 합의의 복원, 의회 정치의 복원,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이요. 이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주변에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요.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그런 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뀔 경우 민주당의 의석을 적게 가져가게 되겠지만,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익보단 우리 사회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또 무엇보다 정당은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여자 K(만 24세, 무직): 정당이 다르더라도, 지금 당장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더라도 한국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시민 간, 정치인 간 건설적인 정치 토론 문화 정착. 정권에 따라 획획 바뀌는 정책 대신 대한민국의 10년-50년을 바라보고 집행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A2. 다양성과 대표성 관련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제가 정치에 무관심해진 이유는 저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과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여성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 단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번 대통령 선거였나 여성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며 2-30대 여성의 표심이 몰렸던 선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성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음에도 우리 집단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에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20-30 여성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언론에서, 국회에서 큰 목소리로 말해줄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한국 정치에 바라는 점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실질적 민주국가'와 '민의를 중심이 되는 시민국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국가'의 건설이에요.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언론사들은 정치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해 현명하게 제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원한다. 국회에는 소수만을 대표하는 이가 아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일단 국회의 구성이나 행정부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다른 질문에서 언급했다시피 사실 국회나 행정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대학을 나와서, 법조인을 하다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는 사람,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 정치권에 진입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 조금씩 상세 사항들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이 '전형적'인 모습에서 살짝만 달라졌을 뿐이지 큰 바운더리를 따져 봤을 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정치 영역에서 더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과소대표 있는 그룹들이 더 많이 대표되었으면 좋겠어요.

A3. 청년 정치 관련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을 듯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청년들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A4. 기타 의견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가 행해지길 바랍니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개인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두고 충분한 지원을 해 주기. 수도권 전 기 같은 공공 자원은 민영화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Q8. 직장, 혹은 조직에서 경험한 문제점, 혹은 ‘갑질’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갑질/문제를 경험하고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을 기대했나요?(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법안 입법을 기대한 적이 있거나 바라고 있다면, 혹은 입법이 되지 않은 경우(e.g.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면 경험/생각을 함께 적어 주세요)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당함’ 사례와 이를 정치의 영역과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출근시간전 출근 및 일의 효율에 따른 야근 강요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원, 작가): 없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군대 조직에서의 경험이 기억납니다. 연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편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그 구조를 바꾸고 싶었고, 적어도 연차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시

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직장 내 수직적 분위기 또는 사회적 구조로 인해 업무 및 인간관계로부터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사회적 구조가 보다 수평적으로 되고, 그에 앞서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향상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는 ‘윗사람’ 인가요?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 인가요? 해당 문제는 특정 법안을 통해 해결 가능하디기보다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간호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과도한 갈등을 일으킨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았으면 했지만 무산됐죠. 이번 의대 증원 이슈로 의사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슈가 되니까 업무 범위가 확장되어 응급환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전부터 간호사가 약물 투여하고 있었어요.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그때 제대로 느꼈어요. 그걸 알았을 때 조금 허탈했죠.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대기업에 근무한 적 있었는데, 기존 직원들의 텃세로 인해 신입 직원들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의 다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인한 문제로 윤리경영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나 개선이 없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할 때, 국회의 근무 환경이 정말 좋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변화를 선도해야 할 국회가 가장 후진적이더라고요. 바쁜 시기에 야근은 당연한 것,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딱히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동원되어 잠도 못 자지만, 모시는 의원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의원이 임면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모신 의원님은 그러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의전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의원들을 보면 보좌진들 참 피곤하겠단 생각한 적도 있죠. 주 52시간 근무제 같이, 근무시간 제한이 국회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발의부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생각해본 적 없네요.

- 여자 K(만 24세, 무직): 직장 내에서 갑질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하여 회사가 대직자를 채용하여 기존 인원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육아휴직자도 복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저의 경우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간외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급여는 받지만, ‘시간외 근무’를 통보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확실히 근무지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경우 저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인격을 무시당하는 수준의 갑질보다는 저와 비슷하게 정시에 퇴근할 권리, 시간외 근무에 대한 의사를 밝힐 권리를 무시당하는 정도의 갑질을 디폴트로 감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본래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처벌받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요구해왔다. (작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질지,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운이 좋게도 ‘갑질’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회초년생 때나 프리랜서 노동자로서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일하던 곳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계약서 양식을 우연히 봤는데요, 계약서의 내용이 ‘을’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손해가 될 상황 발생 시 ‘갑’에게 배상하라는 조항만 가득해서 굳이 먼저 나서서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를 정치와 연결해서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았지만, 전업 프리랜서였다면 바랐겠죠?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아직 직장 경험은 많지가 않아 갑질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조금 더 일찍 발을 들인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은근히 여자들을 차별한다든가, 외모를 지적한다든가 그런 거요. 제가 속한 조직에서 경험한 문제는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수가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교직에 있었던 경험이었네요.

Q9.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본인이 속한 조직(회사/일터)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해당 문항에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변화를 체감 못함', '모르겠다', '무응답'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년들 중에서는 과거 경험한 교육 문제, 본인이 속한 특정 직종과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제, 이전 정부 '흔적 지우기' 등을 꼽았다.

A1. 변화 경험 有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치매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긴 것, 작업치료사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고령사회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함.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할 때 정권 교체와 시장의 교체가 연이어 이루어졌고, 이후 한순간 지원금이 삭감되어 지원사업의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 모임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민들의 자치적 역량을 기르는 사업을 없앤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지휘(결정)권자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거 같다.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전 회사 (SK: 하이닉스) 근무할 시기에 반도체 기업의 지원 비중을 높여줘서 높은 실적과 그에 맞는 성과금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반대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종이 정권 교체로 인해 악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약 2년간 근무했기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 근무하며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 정치권과 정권이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규제가 아니었기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드리는 시기였고, 그로 인해 회사의 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때 과연 해당 규제가 실효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정권이 바뀌면 교육청 포스터 색깔까지 따라 바뀐다. 민주 시민교육은 사장되고 미래교육이라는 사업으로 대체된다. 성평등 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 2년간 0에 수렴한다. 저출생 해결하겠다고 늘봄(8시까지 학교돌봄) 사업을 확대했다. 서이초 선생님 이하 수십 명의 교사가 자살했고, 9.4. 전국 교사 파업과 집회를 불허하고 강력 처벌하겠다는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호령이 있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는 메시지가 소명으로 일해온 교사들의 좌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직 전체의 분위기가 최근 5년 사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거나, 학교를 떠나 버리고 있다. 폭력교사의 시절을 지나 어렵게 만들어온 높은 공교육의 질이 수직하락하는 것은 예견된 미래다.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직,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각 분야와 자리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이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녹번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단체, 기업, 시민이 모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으나, 새 서울시장 취임 후 폐쇄하였습니다. 기사 등에 의하면 ‘60층 규모의 빌딩’을 짓고 코엑스보다 넓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요. 쇼핑몰은 서울 많은 곳에 있지만, 돈 안 되더라도 사회를 위해 일하는 이들이 모인 곳은 유일무이했으나 사라졌죠. 그 외에도 도서관, R&D 연구 뿐 아니라 평화, 문화, 예술, 청년, 돌봄, 여성,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조직이 더 이상 굴러가기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공들여 온 기관들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죠. 많은 곳들이 어려워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고, 제가 일하며 만나는 곳들도 그래요.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이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를 위한 활동들을 보게 되는데, 우선 그것에 들어가는 예산도 시간도, 기존의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요. 그동안 쌓아온 것들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이어갈 수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는 주민,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고 느껴요.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생 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바뀌던 교육 제도 및 입시제도가 기억이 남아요. 교육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지속성이 어느정도 필요한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당시의 집권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바뀌니까 학생들 입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A2. 변화 경험 無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없습니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정권 교체기에는 학교에만 있었어서 제가 느낀 변화는 딱히 없었습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제가 속한 조직이 회사가 아닌 학교라 이 질문은 건너뛰게요!

‘모르겠다’는 의견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정권의 교체에 따른 조직 내 변화를 경험할 만큼 한국 내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Q10.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회나 정치권이 어떻게 뒤바뀐다고 생각하나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변화를 국회/정치권이 바뀐다고 이야기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영향이나 집권 정당의 주요 안건들에 따라 국가 정책들에 변화가 일어나며, 정권 교체에 따라 주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는 형상이 거론되었다. 반면, 정권이 교체가 되고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 중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유사한 문제가 반복됨을 언급하였다.

A1. 변화 경험 有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무요원, 작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갖는 영향력이 강하기에 좋은 대통령이라면 좋게 바뀔 것이고 나쁜 대통령이라면 나쁘게 바뀌는 것 같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지난 정권에서 진행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대하거나 축소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집권 정당에 주요 안건들에 따라 국가정책들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이전부터 타 정당의 시각들을 비방해왔으니 정권교체 시 큰 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한 차순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행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1-2] 답변과 동일. (F: 지휘(결정)권자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거 같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국회나 정치권에서 여당의 힘이 강해지고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어떤 정권으로 교체되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다툼으로 시끌시끌한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아무래도 대통령의 공약을 따르다 보니, 국회나 정치권이 전과 다르게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안 좋게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여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되는 방향으로 가기에 정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정권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정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선 행정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인사가 많이 교체되는 걸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관, 교육감, 위원장 등등 정치권의 다양한 인사들 모두요. 국회의 경우에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구성은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하니까) 안 바뀌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바뀌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다른 정당에 대해 더 비난 하고, 공격하는 방향으로요.

A2. 변화가 크지 않음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에서 다루는 단점정부, 분점정부에서의 상황이 매번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레임덕 주기도 거의 유사하고요.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어떤 정치적 이념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니컬한 답변일 수 있으나.. 정치를 하나의 장기 게임으로 봤을 때 최전선에 내보내는 장기말의 종류가 바뀐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새로 조직을 재편하고, 새로운 인사들을 뽑고... 하지만 이것이 교체된 국회나 정치권의 가장 주요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새부터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가령, 어떤 당에서 젊은 여성 정치인에게 주요 자리를 내주고 언론에 많이 비춘다고 해도 실제적인 정치적 성과나 프로젝트에 있어서 변화를 줬냐고 생각해 보면 아닌 것처럼요.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인들은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개혁이 좌초되거나 개악으로 변질되어 거의 뒤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요.

A3. ‘모르겠다’는 응답자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잘 모르겠음

Q11. 현재의 대통령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현 제도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유도 함께 알려주세요. *제왕적 대통령제란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나 다른 기관의 견제가 약화되고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당 문항에서 무응답, ‘잘 모르겠음’, ‘해당 없음’, 그리고 문항을 잘못 해석한 사례를 제외한 절반 정도의 응답자들은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응답자 J는 부분적 동의).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의 경우, 해당 문항을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가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당위성 문제로 오인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A1.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에 동의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다른 의견을 지닌 정치집단들과의 어떠한 합의나 논의의 과정 없이 인사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는 면에서 충분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이 무색하게 대통령 이외의 권력이 가지는 권한이 너무 적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힘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5년 단임의 임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레임덕을 고려하면 사실상 힘있게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시간이 3년 정도로 제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어떠한 직책에 다수의 동의가 아닌 개인의 인사권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정해질 수 없고 한쪽에 치우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현재까지는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레임덕 등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확신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임기를 본다면 국회나 사법부의 견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요 국가기관장에도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등 검찰 권력이 비대화되고 있으며, 해당 구조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동의합니다. 타 대통령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특히 집단과 추구하는 이익이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1인의 권력이 비대한 현상은, 정치 공동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정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야당이 건재한 국회 이외에는 견제 세력이 부재하고, 국회마저도 최고 권력자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제도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의견에 동의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다당제와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권력 체계로 개혁했으면 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동의한다.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도 거부권 행사 중인 상태 아닌가. 지금처럼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다고 입법, 사법, 경제, 외교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혹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음에도 부리고 있거나) 대통령 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속을 낮추고, 입법부의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현재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인사적인 권력이 너무나도 비대해서,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주요 직책들이 갈아치워지고 시시각각 인물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현상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의 시스템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A2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에 부분적 동의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요.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의 견제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

죽한 건 아니니까요. 예컨대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긴 하니까요. 분점정부 상황에선 다수당인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잖아요.

A3. 잘 모르겠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저에게 밀접한 주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네요. 한국 대통령제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다른 양상의 대통령제가 있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요.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권력분립이 잘 이루어질수록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4. 의견 없음 / 반대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의견 없음.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의견 없음.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반대한다 /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건, 또다른 사람들에 피해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한다

*문항 해석 잘못된 사례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반대, 모든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Q12. 본인은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이것이 응답자의 정체성, 지위, 소속 등과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안전하다는 입장보다는 (부분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이 더 많았다. 안전하다, 혹은 부분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좋은 치안이 거론되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여성이라는 정체성, 사회적 소수자성, 전세사기, 직업적 불안함, 혐오 등이 꼽혔다. 특기할만한 점은 8명의 남자 응답자 중 6명이 ‘안전하다’에 응답했으며, 대부분 치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7명의 전체 여성 청년이 모두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 보다 낮은 사회적 안정성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A1. 안전하다 & 대체로 안전하다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요원, 작가): 안전하다 느낀다. 살면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질 상황에 처한 적이 없다. 새벽에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구급차가 집에 와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굉장히 신속했고 무료여서 기뻐다. 누군가 지갑을 훔쳐 갔을 때 경찰 분들이 무료 로 수사해줘서 지갑을 찾았다. 불가능할 것 같아 체념하던 상황이기에 더욱 기뻐다. 코로나 전시 상황 당시에도 보호받는다느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내가 경험한 위기는 위와 같은 상황 외엔 없었기에 안전하다 느낀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스스로를 이성애자이자 지정성별 남성이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지닌 청년으로 정체화하고 있기에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을 우연히 겪지 않을 수 있었기에 존재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끝끝내 위협하고 불안전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요소를 무시하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치안 측면에서도 당장 길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를 마주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라는 의식을 잠재적으로 지니면서 다니고 있지는 않아요. 북한과의 관계가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 굳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전 불감증’ 일지도 모르겠지만 평소에 제 의식 속에 북한의 존재를 늘 잠재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시스젠더 이성애자로서 성소수자가 한국 내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경험해보지 않았고요, 비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들이 한국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평균적인 대한민국 남성보다 큰 신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의 기준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은 치안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 방송 사례로 접하였을 때 비교해 보면 안전한 거 같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네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한 안전 즉, 위험 0의 국가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A2. 안전하지 않다 & 부분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예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느꼈으나 최근에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음. 청년이다 보니 청년정책과 전세관련 법에 관심이 많으나 매년 전세사기나 청년 문제의 증가 등 불안감 증가함.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직업으로 본다면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같은 직업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간호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간호 기록 뿐인데 이것만으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그렇지 않다 / 한국 사회는 학력, 경력, 재력 등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 제재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걸 경험할 수 없게끔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신변에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자주 나가곤 하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단, 삶이 안전하냐, 앞으로의 삶이 안전하냐의 문제는 다를 것 같아요. 사회안전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회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사회재난은 그 자체보단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의 태도가 사회재난에 대해 숙고하고, 또 예방하고, 무엇보다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고민해야겠죠. 문득 얼마 전에 읽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단지 고통을 구경하고 소비하는 데 그치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 여자 K(만 24세, 무직):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한국인이기에 외국인 등이 느끼는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으며 모든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여성이기에 느끼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여성으로서 인식하는 한국 사회는 위험합니다. 바로 공중화장실만 가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흔적이 남은 구멍들이 수십 개가 뚫려 있고,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가 주위에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집착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청년으로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고용의 불안정함, 단기계약직, 인턴을 위한 인턴을 구하고 쓰이고 잘리는 요즘 고용 형태를 보았을 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더라고 답이 나올 만큼 청년으로서도 사회적 생존이라는 관점에서선 안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아니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와 그와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경제적 안정은 (낮은 수준이지만) 보장된다. 여성, 감정노동직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안전성은 낮은 편이다.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한국 사회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유로는 첫 번째로 높은 자살률입니다. 청년과 노인 할 것 없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국가, 다시 말해 자살이라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범죄(살인, 성폭행)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며, 가해자의 많은 비율을 피해자의 지인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새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신뢰하기까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일상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곳은 인권과 평등, 감수성에 대한 방향이 거의 같다고 전제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생각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밖의 곳에서 만난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기 두려움을 느낍니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당장 귀가를 할 때에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누가 나를 때리거나 죽이진 않는지 불안할 때가 많고요. 특히 요즘에 여성을 겨냥한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더욱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여성인 것도 있지만, 성적 지향에 있어서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느 헤테로 커플처럼 결혼을 하거나,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Q13. 자신의 의견이 현재 정치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그렇지 않은지 적어주세요.

해당 문항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재 자신의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문항이다.

A1. 반영된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반영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동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2. (대체로) 반영되지 않는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그렇지 않음,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저출산의 원인 파악이 잘되지 않음.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세대론의 측면에서도, 정치적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저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시 2030 출마자가 전체에서 과연 10프로는 차지했나요, 또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당선이 됐는지요. 또한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또 다시 발의되었지만 더 논의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기후위기를 골자로 한 법안의 개수는 극히 적고, 그마저도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제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투표를 하는 것 외에 정치에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캐나다에서 거주할 때는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등등의 사회적 이슈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많이 있어서 종종 참여하곤 했습니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군인 월급 인상/처우 개선 등을 본다면 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 부분에서는 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사실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그렇지 않다 / 나는 회사 내에서도 우리는 직원일 뿐, 우리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나서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국회 보좌진도 했고, 국회의원을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저조차 제 의견이 실제 정치권에 확실히 반영된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런데 연결 통로가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떨겠어요. 이유는 많을 겁니다. 의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정당도 정당 내 파벌이라든가 정당 간 투쟁에 몰두한 탓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집약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요구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실제 삶과는 괴리가 있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같은 이슈에 훨씬 적극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전술했듯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기에 결국 진정한 해결책이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아니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제대로 반영은커녕, 성평등은 이번 정권 들어 가장 사장된 이슈 중 하나다. 일례로, 전국 각지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성평등교육 도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성평등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웠던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패했다.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아니요. 7번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담론이 그렇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들, 생존을 위한 것들임에도 문제의 원인을 매번 엉뚱하게 짚고,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니만, 지난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의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여성의 목소리는 무척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대표할 정치인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같아요.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정치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 특성상 주변에 정치권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개네가 늘상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대로 의사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이거든요.

A3. 잘 모르겠다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요원, 작가):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잘 모르겠습니다.

A4. 기타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타 답변에서 많이 언급해서 건너뛰게요)

Q14. 본인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그렇지 않은지 적어 주세요.

해당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청년 응답자들이 정치권에서 본인의 의견이 대표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복수의 응답자들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대표해주는 정당/정치인/정책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A1.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다 & 대체로 대표되고 있다

- 남자 B(만 24세, 사회복지요원, 작가): 정치인들은 부동산들에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기를 찍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남성은 부동산이 적어 대표된다 생각한다.
- 남자 C(만 26세, 기후 활동가): 당원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 부분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2.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다 & 대체로 대표되지 않고 있다

- 여자 A(만 28세, 작업치료사): 그렇지 않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만 의견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음.

- 남자 D(만 36세, 난민지원 활동가): 제가 느끼는 ‘저 스스로가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자면 10점 만점에 2점 정도를 줄 것 같네요. 우선,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저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이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표 시 어차피 당선은 ‘잘 알려진’ 두 개의 정당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 정치적 성향을 담아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면서도 당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이미 생각하면서 투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정치적 의제가 현재의 정치권에 반영되는 정도는 상당히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내 ‘청년들의 정치소외 현상’ 혹은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 현상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F(만 27세, 지방직 공무원): 그렇지 않다. 정치적 대표는 위에서 말했듯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개인이 아닌 모든 국민이 대표다.

- 남자 G(만 24세, 대학생): 정치권에서 제가 대표되고 있다는 느낌은 딱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년 관련 문제들은 많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 관심 부족도 있습니다.

- 여자 H(만 25세, 간호사): 선거철에는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표한다는 느낌이 사실 없어요. 확실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건 투표할 때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 여자 I(만 24세, 금융권 영업직): 그렇지 않다 / 정치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에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다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앞선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니 대표되지 않는다고 느끼죠. 제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치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남성정치라는 말은 어색하고요. 청년정치는 그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치가 보여주기 식인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이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청년 이슈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 남자 J(만 23세, 대학생): 정치권에서 대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매우 드물고 썩썩하지만 정치권에서 해당 정치인의 의견이 관철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 M(만 30세, 대학원생): 아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국회의원의 분포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위층이고 기득권을 가진 계층으로 편중되어 나타나고, 청년과 사회적 소수자가 국회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점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 여자 N(만 36세, 초등학교 교사): 그렇지 않다. 정부정책 토론에 초빙된 전문가가 자질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저출생 대책 토론에 경제학 교수가 초대되는데, 현상과 원인 분석, 대책 모든 면에서 이슈에 대해 충분히 현실감 있는 의견을 내지 못한다. 교육, 게임, 청년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자녀 여성 청년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실종된 상태라고 느낀다.

- 여자 P(만 22세, 대학생):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계속 언급해서 또 반복하기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회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남성 중에서도 40대 - 50대의 기성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들은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하며 어떤 위험에 직면하며 사는지 잘 모를 거잖아요? 제 시각에서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모를 테고요. 그래서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저랑 비슷한 나이대와 성별과 관심사의 사람이 정치권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종종 해요.

A3. 모르겠다

- 남자 E(만 29세, 대학원생):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과 정당이 20대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4. 기타

- 여자 L(만 22세, 대학생): (타 답변에서 많이 언급해서 건너뛸게요)

- 여자 O(만 24세, 교육 관련 기관 활동가, 프리랜서): 2-2에서 함께 답변했습니다.

III. 정치인들에게 고함

우리가 사는 일상은 수많은 정치적 선택과 결정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인터뷰 결과, 청년들은 저마다의 삶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다고 긍정하는 응답은 한정적이었다. 정치에서 청년이 소외된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렇다면 청년들의 대표성 강화,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그 개혁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공천방식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촉구한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로는 오늘날의 공천제도를 지목하는 바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030 세대 후보자는 총 38명으로 전체 후보자 대비 5.4%에 불과했다. 이 38명 중에서도 흔히 ‘험지’에 배치된 후보자의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에도 당선 안정권에 있는 2030 세대의 청년은 더불어민주당연합이 3명, 국민의미래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당선인의 통계를 내 본 결과, 20대의 당선인은 0명,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당선인은 10명으로 당선인 중 청년의 비율은 3%에 그쳤다.⁴ 애초에 공천을 받은 청년 세대의 수가 적으니, 총선 결과 청년의 대표성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청년후보 공천을 늘리겠다고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청년 대표성의 확보는 공천 방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년이 제대로 대표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개혁을 촉구한다.

첫째, 각 정당은 공천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라.

공천권을 가진 기성 세대가 자신의 입맛대로 공천을 줄 수 없도록, 각 정당별로 공천을 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해야 한다. 사실 이 방안은 가까운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제47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필요한 민주적 절차와 증빙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명문화하였으나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해 12월에 폐지되었다. 정당의 자율성이 대체 무엇이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유권자가 의회 구성에서 대표될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인가? 적어도 유권자들이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후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후보자로 나서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후보자의 자격 검증 절차와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근거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라.

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현재 상황을 보면, 거대 정당들의 청년 당원 중에 공천을 받는 수는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이다. 더불어, 청년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청년 당원을 육성하여 당의 후보자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닌 대중적 인지도가 높거나 이미 외적인 성공을 이룬 청년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청년들로 하여금 당원으로 가입하여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자를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결국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고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청년 당원들을 인터뷰한 논문에 따르면, 정당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청년 당원들은 정당이 청년을 ‘동원, 이용, 소비, 소모’하고 있다는 점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⁵ 이는 우리가 시행한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더 많은 정치적 기회를 준다면 청년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청년의 상황들을 제대로 고려한 결론이 도출 될 것이라 믿는다. 또, 외적인 성공을 이룬 청년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보다는 정당 내부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구태여 청년을 외부에서 들여올 필요 없이, 정치에 뜻이 있어 당에 가입한 청년 당원들에게 공천을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자신이 ‘청년 의제’에 귀기울이고 있음을, 당 내부에서도 청년 당원들을 중요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셋째, 청년 정치인 양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

정당의 존재 목적은 유권자의 의견을 결집하고 대표하는 데에도 있지만, 정치인을 양성하는 집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득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오늘날의 정치 필드에 등장할 수 있게 하려 면 결코 정당의 ‘정치인 육성’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공천 제도 말고도 또 개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선거 제도이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두 거대 양당은 386세대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 거대 양당이 급진적으로 공천을 변혁하지 않는 한, 청년은 계속해서 과소대표될 확률이 높다. 청년들의 대다수는 지금의 정치권이 취업 시장, 주거 불안, 경제 불황 등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

⁵ 윤지소, 권수현, (2020),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청년당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3)

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느낀다. 20대와 30대의 유권자 중 약 30% 정도가 무당층인 것도 이러한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⁶

지금의 ‘정치권’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여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계속해서 여야를 나누어 가졌던, 그 ‘거대 양당’이다. 현재 국회 양상을 보면,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펼치기 바쁘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 당 열혈 지지자들의 요구에 맞춰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포퓰리즘’의 형태에 가깝다.

두 개의 거대한 진영의 전쟁으로 불타오르는 지금의 정치권이, 당장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즉, 의회에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위성 정당 같은 모순적인 장치가 없는, 득표수가 그 정당의 의석 수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 분들께서 연구하신 바 있어, 상세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한다.

선거 제도를 개혁하여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협의의 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뉘베르제의 법칙에 따라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으로 인해 다당제가 의회 내 형성된다면, 각기 다른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 이 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정당 간 갈등은 완화될 것이고, 개개인의 정치인에 맞춰진 비난으로 물들여진 국회가 아닌 제대로 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가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하나, 대표성 증진을 위한 투표제 개혁을 촉구한다.

선거제도의 개편과 함께 개혁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투표 방식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현행 상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약 36%의 지지율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표적 예

⁶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5553>

시가 될 수 있겠다. 현행 단순 다수제 대통령제에서는 이처럼 대표성과 정통성이 미비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단순 다수제를 채택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정치 영역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다.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우선 대통령을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자”는 사뭇 가벼운 생각을 지니고들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더불어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쉽게 지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단순 다수제에서 벗어나, 결선 투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앞서 언급했던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더욱 신중한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테다. 더불어 유권자들이 자신의 1순위뿐만 아니라 다른 선호 후보를 표명할 수 있게 되면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투표의 유인을 줄이는 현상을 유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의견의 반영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 파트에서 언급했던 다당제의 형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소정당들은 2차 투표를 앞두고 대형 정당들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데, 정당 연합을 통해서만 과반 득표가 가능한 상황 속 대형 정당들은 군소정당들의 내각 참여 혹은 정책 수용 요구에 반응해야 하고, 이는 정치적 양극화 완화 효과 및 연립정부 형성의 기틀을 제공한다. 즉석 결선투표제 역시 고려해 볼 만한데, 이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후보자들이 차순위 선호 후보가 되는 것을 선거 전략 중 하나로 상정하기에 더욱 폭넓은 이슈를 포용하여 양극화를 완화하는 유인이 되리라 예측된다. 이 같은 효과는 최근 미국의 즉석 결선투표제 도입 사례에서 확인된다. 정리하면,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출권력의 대표성이 현저히 증진되어야 하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 투표제의 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하나, 권력구조의 개편을 촉구한다

공천제도,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권력 구조의 개편도 불가피하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력’은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권에서 ‘중견 정치인’으로 흔히 명명되는 주요한 정치인들이 소유한 권력을 가리킨다.

첫째,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라

청년들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뽑는 것들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제도의 특수성에 기원한다. 대한민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탄생하는 핵심적 원인은, 정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공천권과 장관직 등을 무기로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되는 ‘내각제식 국정운영 방식’으로 현재의 대통령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력은, 특히 인사권의 측면에서의 축소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및 제89조제16호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관리자 등을 임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근거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폭 넓게 인정되고 있는 상태다. 행정부 산하의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인사에 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과 같은 주요 장관급 직위들의 경우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통령 한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인사의 범위가 굉장히 크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큰 범위에 비해, 의회가 사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즉,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은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뿐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다.⁷ 이러한 대통령의 방대한 인사권이 축소되어야만,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법, 행정, 입법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당 지도부의 권력을 개편하라

대통령 권력과 더불어 개편되어야 하는 또 다른 권력은 당 내부의 권력이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한 당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 또는 최고위원과 같은 주요 인사들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며, 어느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 정치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자

⁷ 이선우, (2022), 한국 대통령의 제도적 인사권과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법률개정을 통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가능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1권 제3호

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당대표와 친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던, 제22대 총선에서 그러한 현상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표 및 시·도당 위원장과 같은 중견 정치인들의 공천권이 비대해지는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개개인의 ‘주요’ 정치적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견제하고 방지해야 한다.

IV. 동료 청년들에게 고함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 정치에 대한 다양한 청년들의 생각과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정치 세력인가? 우리가 염원하는, 청년의 입지가 보다 대변되는 정치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물음을 좇으며 우리는 감히 ‘청년’을 대변하는 몇 가지 정치 개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개혁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관심과 의지이다. 청년들이 대표되는 정치제도 및 문화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겠지만, 유권자들의 숙고와 올바른 정치 의사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정치인이 막대한 권력을 지닌 것은 아닌지, 이들이 유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사권과 의제 설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또, 아이돌의 팬덤처럼 자신의 선호 의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적절한 비판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청년들을 주목하기 바란다면 우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